

당정, 서민 소득세 완화·법인세 인하 추진

세제개편 당정협의서 공감대
징벌적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중소기업 상속공제 등 지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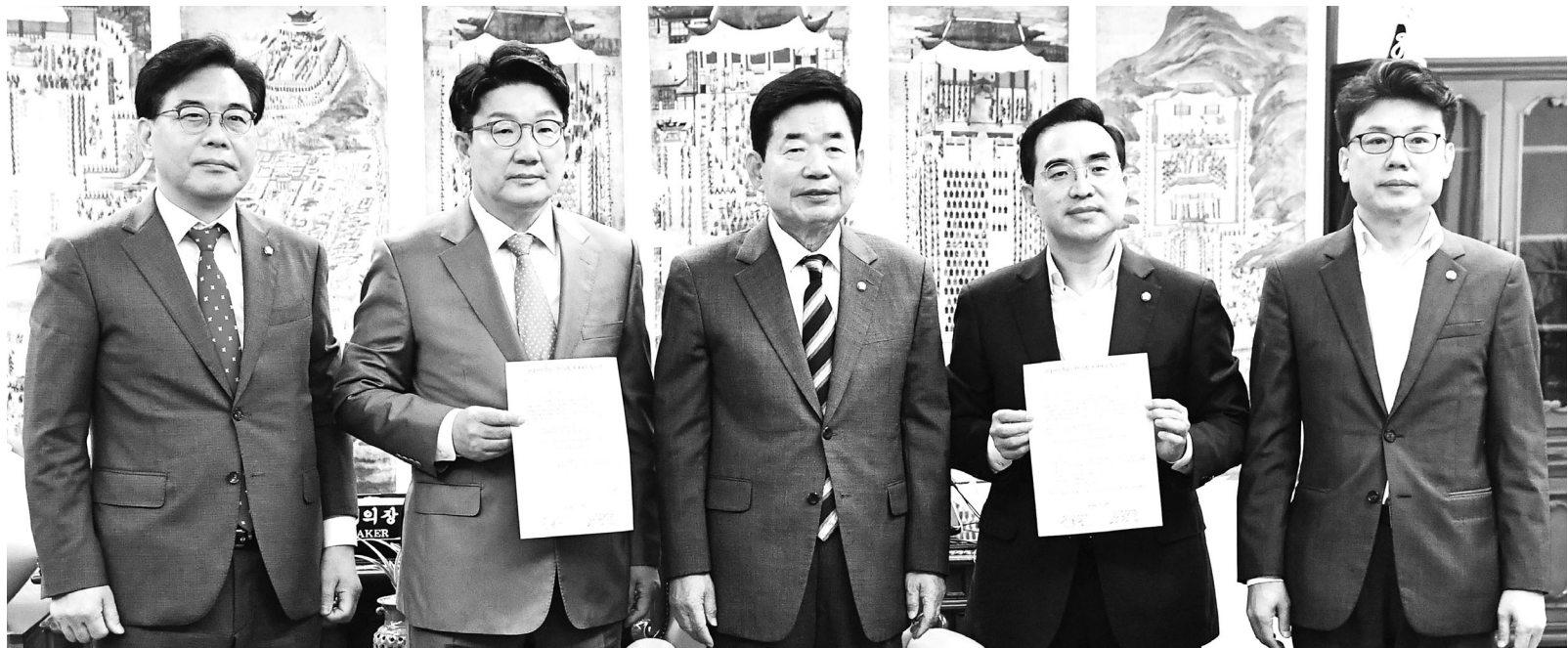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 같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장된 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호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히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에 대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

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 구성 협상 21일까지 마무리”

점점 못 찾자 절충...민생특위 구성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디데이'였던 전날 제한절까지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자, 일단 이견이 없는 일정부터 진행하기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개문발차' 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민생특위 및 인사청문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제한절 경축식에 앞선 한담에서 '선 대정부질문, 후 상임위 선출 협의'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안 등은 원 구성 협상과 '일괄 타결' 해야 하는 만큼 이날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아울러 여야는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7월 국회 주요 일정	
18일	여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비교섭단체 1명)
20일	결의안 처리·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21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국회의원구성협상 마무리
25일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DJ 닳고 싶다” 당권행보 시동

묘역 참배...“민생정당 리더십”
비명계, 결사저지 대대적 공세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사진)의 첫 행보는 ‘민생’이었다. 이 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고문 측 관계자는 “첫 일정을 DJ 묘역으로 잡은 것은 민주당을 실용·민생정당으로 변화시킬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1998년 IMF 사태를 극복한 ‘DJ 리더십’으로 지금의 민생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J 묘역 참배는 그간 당내 비주류로



서 체감했던 적통성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당내 통합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시 ‘계파 공천’이나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이 고문의 등판이 현실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 공세를 가하며 ‘이재명 당 대표’ 결사저지 태세를 보였다. 비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분열이 심화할 것인데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총선에 실패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사정당국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앞세운 견제구도 이어졌다. /연합뉴스

청년내일저축 계좌 모집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